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2014년 4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2014년 3월 22일 ~ 2014년 4월 10일

주요 키워드

- 1. 원격의료** :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안 국무회의 상정 의료법 개정안 의결 전 시범사업 6개월 시행 (3. 25)
- 2. 의료자법인** : 정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기준 6월까지 마련 규제개혁 후속조치 계획 발표 ... 삼성 갤럭시S5 수혜 (3. 28)
- 3. 간호인력 개편** : 간협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불참 선언 의-정 협의 부당성 이유 ... 대국민 홍보전 및 규탄집회 예정 (3. 26)
- 4. 복지** : “가난한 환자 사망률 높은 것이 대한민국 현실” 전병헌 원내 대표, 보편적 의료서비스 확대 정부여당 협력 촉구 (4. 8)
- 5. 기타** : 건강보험료 과다부과, 대응제약 - 건약 '우루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

1. 보건의료정책

○ 정부, 결핵환자 접촉·복약 조사 실시 24일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3. 24)

○ 7월부터 신약 보험등재 소요기간 최대 70일 단축 리베이트 의약품 '삼진아웃제' 시행 ... 7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3. 25)

오는 7월부터 신약의 보험등재 소요기간이 최대 90일 단축되고 리베이트로 3차례 적발된 약제는 보험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일명 '리베이트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다. 또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도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5월 24일까지다.

◆ 리베이트 3회 적발시 급여시장 퇴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약제는 1년 범위에서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해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된다.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정지 기간 만료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산출된 정지 기간에 2개월 가중 처분된다.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재위반해 산출한 가중처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가중처분을 받은 약제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위반(3회째)한 경우에는 급여시장에서 영구히 퇴출된다.

◆ 대통령, 건보분쟁조정위원장 임명 ... 7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위해 위원장의 임명 절차 등 사무국 설치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특히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위원회 위상이 높아졌다. 아울러 현재 비급여인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가입자 본인부담 50%)에 포함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복지부는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는 미적용한다”며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을 20%(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30% (만성질환자)로 한다”고 밝혔다.

◆ 급여제한여부조회서 서식 개정 ... 신약 보험등재 소요기간 단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 내용은 ▲급여제한여부조회서 서식 개정 ▲신약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서 우선 첨부 ▲약제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직권조정 사유 추가 등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사고부상·교통사고 등으로 내원 시 건강보험 적용여부 확인을 위해 공단에 제출하는 ‘급여제한여부조회서’ 서식을 개정해 내원방법, 발생장소, 발생원인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건강보험 급여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 신약의 보험등재 소요기간 단축(총 60~90일 단축 예상)을 위해 요양급여결정 신청 시 허가증(신고서) 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서를 우선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 치료감호소 의사 인력 부족 ... 17명 정원에 10명 근무 (3. 25)

○ 건보공단, 27일부터 재가급여기관 평가 (3. 2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1개월 동안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가기관에 대한 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2012년에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평가대상기관은 2012년 말까지 설치된 기관으로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수급자수가 3인 이상이며, 평가개시일 현재까지 계속 개업 중인 총 7031개소다.

○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안 국무회의 상정 의료법 개정안 의결 전 시범사업 6개월 시행 (3. 25)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10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간에만 허용돼 있는 원격의료가 의사-환자간으로 확대되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허용된다. 단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은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에 처한다. 또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 해 원격의료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낮추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개정안 시행 전 시범사업 실시’ 내용이 추가됐다.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료계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후 시행 전에 개정 의료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부칙에 시범사업 규정을 추가했다”며 “의사협회와 협의한 대로 개정안 의결 전에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안이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청력장해 등 7개 상병, 산재 예방관리 대상 포함 (3. 25)

‘청력장해’,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애’, ‘턱·얼굴 신경손상’,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 7개 질환 무장해자들도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5월부터 산재 요양 후에도 잔존할 수 있는 후유 치료를 지원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상병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관리 대상 상병은 2000년 11개에서 이번에 추가한 7개 상병을 포함, 총 42개로 늘어났다. 합병증 예방관리는 산재 요양 종결 후 1~5년 동안 진찰·검사·약제·치치 및 물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자 보호와 함께 재요양률 감소로 인한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되어 왔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선안은 노동부가 지난해 연구용역,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한의학협회 등의 “심근경색 등 무장해 상병은 요양 할 때와 치유된 상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적정요양 관리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

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 복지부, 2기 전문병원 ‘수가 가산’ 제시 의료인력 평가대상 기간 확대 및 제도 기준 완화 본격화 (3. 25)

오는 6월 공포될 전문병원 2주기에 대한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문병원들이 필요성을 피력해왔던 제도적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건훈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과 사무관은 25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전문병원 정책설명회’에서 2014년 전문병원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우선 1기에서 지정기준으로 평가됐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수와 더불어 2기에는 의료 질에 대한 높은 니즈의 요구로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을 추가했다. 김 사무관은 “1기 지정 기준 당시 일부 유예됐던 임상 질 등의 인증기준에 대한 것들이 추가될 예정”이라며 “주로 인프라나 병상, 진료과목에 대해서만 평가 했는데 전문병원들의 의료 질에 대한 높은 니즈로 지난번 유예했다가 이번에 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력에 대한 평가대상 기간도 확대된다. 그는 “기존에는 의료인력에 대한 평가를 평가 3개월 전까지 기준에 맞는 의료인력이 있으면 인증이 됐는데 평가기간 동안만 인력을 채우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제 전문병원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알려졌기 때문에 적어도 평가하기 1년 전 기준 의료인력을 갖춰야만 전문병원에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분야별 지정기관 수는 소폭 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현재 제도는 전문병원 분야별 지정기관 수가 척추 17개, 관절 10개, 산부인과 13개, 뇌혈관·심장·유방 분야 각 1개 등 적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사무관은 “진료과목과 질환이 중복된 분야인 관절, 척추질환, 정형외과 등은 질환 중심으로 지정하고 모자병원처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병원 등을 신규분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진료분야인 뇌혈관, 심장, 유방, 화상,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지정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뇌혈관, 심장, 유방 질환의 경우 현행 45%였던 환자구성비율을 30%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화상과 소아청소년과 과목은 외과, 내과, 정형외과 및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각각의 필수진료과목을 외과,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로 축소했다”며 “뇌혈관 병원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의료인력보다 지정기준이 높다해 6인 이상으로 수정했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문병원들이 꾸준히 지적해왔던 별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김 사무관은 “서비스의 질, 효율적 의료이용 성과 등을 바탕으로 가산체계 개편과 연계를 검토 중”이라며 “수련 협력기관 제도화 시 우선 적용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전문병원 시행규칙 및 고시개정 입법예고는 오는 4월초에서 5월 중순 이뤄질 예정이며, 6월말 공포된다. 전문병원 지정신청 공고는 7월에 이뤄지며, 지정완료는 12월에 마무리된다.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통합수련제 도입 ... 수련병원 의료기관인증 의무화 (3. 25)

‘주당 100시간’이라는 과도한 수련시간으로 수련의 질 저하는 물론 환자 안전문제까지 제기됐던 전공의 수련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합수련제도 도입, 수련병원 의료기관인증 의무 등 수련병원의 질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합수련제도는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과 수련시간 측정방법을 병원별 수련규칙에 포함하고 복지부 장관에 제출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수련규칙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고 수련규칙 미제출 혹은 시정명령 미이행시 정원조정 또는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8개 항목은 최대 연속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주당최대 수련시간,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당직수당 등이다. 그밖에 출산 전공의의 수련기간을 출산휴가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인턴) 또는 3년9개월(레지던트)로 명시하며, 대한의사협회로 정해져 있는 전문의시험 위탁기관을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다양한 수련프로그램 도입을 허용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해 전공의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전문의 육성에 도움이 되며, 환자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 식약처, 6월까지 규제 전면 재검토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 운영 (3. 25)

○ 건보공단, 수가협상 앞두고 5개 의약단체와 간담회 (3. 26)

○ 복지부, 2차 의정협의 후폭풍에 고심 깊어져 의협, 총파업 재추진 논의 … 간협, 간호인력협의체 불참 선언 (3. 27)

제2차 의-정 합의로 2차 집단휴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진이 지속되면서 복지부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정부가 원격의료법을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재추진을 논의키로 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2차 의-정 협의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간호인력개편협의체(간호인력개편TF) 불참 카드를 꺼냈다. 의협은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대의원 총회에 총파업 재추진 여부를 묻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만약 이 안건이 대의원회에서 통과되면, 어렵게 봉합된 의-정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와 관련한 2차 의-정 협의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2차 의-정 협의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사자인 간호사를 배제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PA합법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간호협회는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간협은 26일 "PA인력 대부분이 간호사임에도 당사자를 배제하고, 정부가 당사자도 아닌 조직(의협)과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합의를 했다"며 "정부와 의협의 협의결과 철회시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총파업 재추진 논의와 간호인력개편TF 무산 위기에 복지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 정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기준 6월까지 마련 규제개혁 후속조치 계획 발표 … 삼성 갤럭시S5 수혜 (3. 28)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 '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규제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일 제기된 현장건의 사항 52건 중 41건을 수용, 관련 제도 조치를 연내 추진키로 한 것이다. 보건 의료 관련 규제개혁 추진 안건은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제조업체별 허가로 전환 ▲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중승인 완화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 ▲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해소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공공기관 위탁 등이다. 정부는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자법인 설립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에 종합병원 설치만 가능한 것을 전문병원과 일반병원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국내보험사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도 허용된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중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단 해외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유치업자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원격의료 등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 추진의 첫 수혜 제품은 삼성의 갤럭시S5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 안건에 '운동·레저 목적의 스마트폰, 이어폰, 러닝머신 등과 결합된 심(맥)박수 측정센서는 의료기기법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심박 센서는 27일 시판을 시작한 삼성 갤럭시S5의 비활성화된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은 4월중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심박센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 심평원,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 위한 사업방향 공개 (3.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발표한 '3개년도 실행계획'에 따라 27일 2개년차 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단체 및 환자·소비자단체 실무자 30여명과 '워킹그룹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급여기준 개선 추진성과(96개 항목, 34.4%) 및 앞으로 2년(2014년~2015년)에 걸쳐 추진될 나머지 183개 항목의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방향 및 계획이 공개·공유했다. 심평원은 접근성·투명성·전문성을 중심으로 급여기준의 합리성 확보 및 적정 진료 보장, 급여기준 설정의 투명화 등 현장 중심의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급여기준 설정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심평원, 문제 많은 치료재료 항목 손질 나선다 (3. 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치료재료 항목 개편에 나섰다. 심평원은 31일 "행위료에 포함돼 산정불가로 결정된 치료재료 비용이 행위료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업체의 지속적인 불만을 받아들여 별도 보상기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치료재료 비용은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돼 있어 별도산정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산정지침' 또는 '주' 사항에서 명시한 경우나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별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요양급여 결정신청(직권결정 포함) 치료재료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본인일부부담·비급여·산정불가(행위료 포함)로 구분해 고시하고 있으나, 급여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치료재료 급여여부 결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객관·투명화 하기 위한 '치료재료 별도보상 결정을 위한 알고리즘'을 마련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료 과다 부과' 불만 매년 증가 (3. 31)

"보험료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932건으로 전년도(3034건) 대비 약 30% 증가했다. 이의신청 중 가장 많은 것은 보험료 관련으로 71.8%에 달했다. 보험료 관련은 전년도(2309건) 대비 514건(22.3%) 증가하는 등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료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주택, 전월세보증금,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실시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 집중 점검 (3. 31)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올해 중점 점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상반기)와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하반기)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올해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상·하반기 각각 75개소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 "의료인 동의 없어도 분쟁조정원 갈 수 있어야" 오제세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3. 31)

의료분쟁시 피신청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중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사고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또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당한 목적에 의한 조정신청인 경우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건종료 규정을 두어 조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일본, 대규모 역학정보 공개 ... 만성질환 연구 활용 (4. 2)**

국가 코호트 사업으로 구축된 21만건의 한국인 유전체역학정보가 공개된다. 코호트란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로, 장기 추적을 통해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질병 발생 정보를 비교해 질병 원인을 구명하는 연구 방법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질본)는 2일 “만성질환 대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수행을 위해 국내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공개정보는 연구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후 수집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관련 정보는 모두 제외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2001년 시작돼 반복조사를 지속하고 있는 지역사회 코호트의 2010년까지 추적조사 자료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한 도시 코호트와 농촌 코호트 기반조사 자료 등 일반인 코호트 참여자 약 21만명에 대한 설문조사, 임상검사, 검진 결과이다.

○ **공정위, 휴진참여 독려한 노환규 의협회장 등 고발 투쟁위원 5명 고발 ... 의협에 5억원 과징금 부과 조치 (4. 3)**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달 10일 1차 과업투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투쟁위원회 위원들을 고발 조치하고 5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노환규 회장은 3일 공정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의협 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노환규 의협 회장 겸 투쟁위원장과 방상혁 기획이사(투쟁위 간사), 송후빈 충남시의사회장(투쟁위원), 정영기 대한병원의사협회회장(투쟁위원), 송명제 전공의비대위원장 등 5명이며, 고발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심평원, 의료기관 질향상 컨설팅 나선다 (4.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20일, 의료의 질 향상 활동 지원을 위한 ‘QI(Quality Improvement) 컨설팅’ 대상 8개 기관을 모집한다. 심평원은 2011년 4개 기관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과 2013년 각각 6개 기관의 ‘QI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QI컨설팅’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문제과약 및 개선전략 수립에서 보고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인 질 향상 활동의 전 과정을 기관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한다. 컨설팅 대상은 향상 활동계획, QI 교육과정 우선제공, 기관 직접 방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질 향상 활동 결과에 대한 피드백, 질 향상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질 향상 활동 전 과정이다. 대상기관 중 질 향상 활동 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QI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특별상을 수여하며, 컨설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QI 담당자(또는 적정성평가 담당자)가 있으면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의 질 향상이 필요한 중소병원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단, 일부 기관은 동일지역 신청 시 지역단위 통합 지원 대상자로 모집한다.

○ **서울시, 의료취약계층 3만8천명 찾아간다 (4. 3)**

서울시가 올 한 해 서울역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 3만8000명을 찾아가서 진료한다. 서울시 ‘의료취약계층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서울시 산하 총 13개 병원 중 4개 정신병원을 제외한 9개 시립병원의 40명 전문 의료진(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과, 안과, 피부과 의사 5명, 간호사15명, 약사5명, 의료기사6명, 행정9명)이 참여하는 ‘나눔진료봉사단’을 통해 이뤄진다. 2009년 처음 시작해 점차 확대 발전 중에 있다. 중점적으로 찾아가는 대상은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독거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다.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서비스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2곳(금천구, 성북구)를 찾아가간다.

○ **식·의약품 불법성분 분석자료집 발간·배포 (4. 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 및 의약품 중 함유된 불법 위해성분 등을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한 '식·의약품 분석 라이브러리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배포되는 자료집은 식품 및 의약품 중에 불법으로 첨가되어 적발된 사례가 많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136성분에 대한 분석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 심평원, 통계청과 손잡고 질병 분류 연구 나선다 (4. 3)

○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참 좋네요” “요양기관 진료비 846억원 절감” (4.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삼차원CT 등 16개 항목을 선별한 뒤 요양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통보 및 선별집중 관리한 결과, 진료행태 개선 등을 통해 지난해 846억원(사전예방금액 539억원, 심사조정금액 307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사전 예고한 뒤, 집중심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구성 박차 추진단장에 최영현 실장 내정 ... 손호준 과장, 추진기획팀장 발령 ... 의협, 불쾌감 표시 (4. 8)

대한의사협회가 중앙집행부와 대의원회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 정부가 원격의료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원격의료추진단장에 내정하고, 손호준 한의약정책과장을 원격의료추진단 기획팀장으로 발령하는 등 사실상 원격의료추진단 구성을 공식화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추진단은 복지부 주관 아래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조직으로, 시범사업 전·후·경과를 모두 포함한 원격의료 정책 추진에 집중할 전망이다. 추진단은 ▲기획·제도팀 ▲사업팀 ▲IT팀 ▲해외협력홍보팀 등 4개의 팀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기획·제도팀은 원격의료 관련 기획업무·제도·정책 등을, 사업팀은 시범사업 운영 관련 사항을, IT팀은 원격의료 관련 정보기술 업무를, 해외협력홍보팀은 외부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대외 홍보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추진단 구성에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원격의료의 의료계에 민감한 사안인 동시에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정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진단에 관한 언급 자체를 조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추진단 구성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시범사업은 6개월이기 때문에 (추진단을 구성해도) 시범사업만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대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의협은 이번 주 내로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정리,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의 원격의료추진단 구성 소식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추진단이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추진단 구성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단부터 구성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정부의 일방적 추진단 구성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의협은 지금 노환규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 세력과 대의원 세력간에 퇴로 없는 파워게임이 한창이다. 노회장이 전회원 사원총회 개최(4월26일 예정)와 회비 중양회 직접 납부 등의 카드로 대의원 세력을 견제하고 나서자, 대의원회는 사원총회 포기와 정관 준수를 요구하며 노 회장을 압박하는 등 일촉즉발의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

○ “정신질환자 구속시 보호자 통보 의무화” 이상직 의원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4. 8)

정신질환자의 신체를 구속할 때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7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한 경우나 신체적 제한을 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상직 의원은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 또는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병원 측의 통제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초래해 왔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가난한 환자 사망률 높은 것이 대한민국 현실” 전병헌 원내 대표, 보편적 의료서비스 확대 정부여당 협력 촉구 (4. 8)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을 향해 보편적 복지의 강화를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실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해도 가난한 의료급여환자 사망률이 일반 환자보다 질환별로 많게는 56%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것이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의 치욕적이고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7일, SBS는 전국 66개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13만 명을 4년간 전수 조사한 결과 위나 장 출혈 같은 질환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사망률이 일반 환자보다 56%나 높았으며, 폐렴 30%, 뇌혈관 질환 21%, 심근경색은 19%나 더 높다고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사망률이 더 높은 원인의 80%는 값비싼 비급여 치료를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나머지 20%는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번 연구의 결론은 명확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4년간 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진의 결론”이라며 “해답은 복지강화와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해온 보편적 복지 확대,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확대와 보장성 강화”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인간의 존엄과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정치의 이유”라며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력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심평원, 4월부터 심사사례 공개 정례화 (4.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4월부터 정기적으로 심사사례를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사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다. 환자 특성(상병, 성별, 입원일 수, 환자상태 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 사례가 공개된다. 주요 공개 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 및 의·약학적 판단에 차이가 있는 항목 등이며,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2. 보건의료산업/기술

○ “페루, 한국산 의료기기에 관심 높아”제품 성능·가격경쟁력 주목 ... 현지 에이전트 발굴해야 (4. 4)

○ 네트워크병의원협회, ‘의료시장 매출 증진 전략’ 세미나 (4. 4)

○ 의수협, 해외 바이어 대상 영문홈피 개설 (4. 9)

3. 제약업계

○ 의약품 수출 영문정보제공 사이트 오픈 (3. 24)

국내에서 생산, 허가받은 모든 의약품의 제품명과 성분명, 생동여부 등 기본 정보를 영문으로 검색하고 수입 상담을 위한 문의까지 가능한 홈페이지가 4월 부터 가동된다. 국산 의약품에 대한 외국 바이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개별 제약사들의 업무 부담도 덜어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 대응 결국 소송 취하 ...건약 “약효 재평가 요구할 것” 대한약사회 중재로 일단 ‘봉합’ ... 약효 논란은 이어질 듯 (3. 25)

대응이 우루사 약효 논란을 야기했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약 회원인 이모 약사, 책자를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했다. 다만, 건약은 우루사 효능에 대한 재평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응은 25일 “대한약사회 중재요청에 의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취하를 했고, 이씨의 공식적인 정정 입장이나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건약측은 “소송 취하는 당연한 것”이라며 “대응이 얻을 이익이 없거니와, 건약 같은 시민단체가 기업을 감시하고, 나쁜 일 못하게 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 소송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 “내일(26일) 아마 비공개로 만날 것 같은데 양측 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만나는 자리에는 약사회가 함께할 예정”이라며 “회의 뒤 소송 철회와 양측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효능 논란이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응측은 당사자 중 하나인 이모 약사의 사과, 혹은 정정을 요구하고 있고, 건약측은 대응의 UDCA의 피로회복 효과 입증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학적 기준에 따른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약 관계자는 “식약처에 우루사 재평가 요청을 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반기 국정감사에 국회의원 동원해서 식약처 국정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싸우면 친해진다? ... 대응-건약 ‘화해’ “소송 취하하고 우루사 논란 없던 걸로~” ... 해보니 우리만 손해? (3. 27)

대한약사회는 26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원 리병도 약사와 대응제약 사이에 최근 발생한 우루사 관련 양측 입장차를 조율하는 자리를 갖고 원만한 중재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의약품 전문가로서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약사의 사회적 책임이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중재를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리병도 약사는 “MBC 인터뷰에서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 성분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인터뷰 의도와 달리 일반의약품인 우루사가 소화제로 인식되는 오해가 발생되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응제약의 회사 이미지와 마케팅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응제약은 “우루사 관련 소송의 의미는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MBC 인터뷰 내용을 정정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약사회의 중재 의지를 존중하여 소송을 취하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입장을 조율해 중재안을 도출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상호간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승자는 건약이다. 대응제약은 당초 건약과 리병도 약사에게 소송 취소의 전제 조건으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상대의 유감 표명 정도에서 이번 사건을 봉합했다. 더 해봤자 우루사의 이미지만 나빠질 뿐,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 식약처, 제네릭 심사정보 매달 공개 첫 공개대상 로수바스타틴·엔테카비르 등 27개 품목 (4. 4)

4. 의업단체

○ 의료영리화 정책 치과 의사들 반발 (3. 22)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들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회원들은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를 무한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며, 구호와 함께 의료영리화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원격의료 실시,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보건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대상이라고 노골적으로 선전한다”며, “반면, 의료영리화로 발생될 국민들의 부담증가와 건강한 위협에 대한 우려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 김현숙 회장 “실무간호인력 정체성 확립할 것” 간무협, 4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비공개 회의서 입찰 비리 의혹 해명 (3. 23)

“올해를 ‘실무간호인력 정체성 확립의 해’로 선포하고, 의료선진국의 실무간호사, 준간호사와 같은 간호인력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김현숙 회장은 22일 서울 세종대학교 세종컨벤션센터 A홀에서 열린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다짐했다. 김회장은 “간호인력개편의 핵심은 장기간 방치해 온 간호조무사 직종을 실무간호인력으로 양성하고 관리해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간호인력개편이 효과직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자단체 “의정협의를 ‘삼류 드라마’” (3. 24)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의협은 파업의 핵심 명분이면서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지지까지 얻었던 원격진료 반대와 의료영리화 반대는 그럴듯하게 포장해 정부에 양보하고, 수가인상의 통로가 될 건정심 구조를 의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전리품만 챙기는 속칭 ‘삼류 드라마’ 한편을 연출한 꼴”이라고 의정협의를 비난했다. 또 “의료영리화 정책을 의료계나 국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의사총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환자 생명을 불모로 정부를 협박한 의협의 비신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약사회 “원격의료 하려면 성분명처방도 해야” (3. 24)

대한약사회는 24일 대한의사협회가 그 동안 원격진료를 전제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을 주장해 온 것과 관련, 시범사업 추진을 전제로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도를 포함해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처방약 택배배송 방법의 문제점인 변질, 오염, 분실 등의 문제 등이 도리어 더 많은 환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저가조제약 인센티브시스템을 연동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까지 알뜰하게 살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환자를 위한 마음으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까지 주장할 정도의 진정성을 가진 의사협회라면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도를 당연히 수용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 원격의료 의협이 부추겼다? 유지현 보건노조 위원장 “1년 명시 시범사업기간 의협이 6개월 단축 합의” (3. 25)

“의료법 개정안에는 시범사업 기간이 1년이라 명시돼 있는데, 오히려 의사협회가 의-정 합의를 통해 6개월로 단축시켜 원격의료 추진에 힘을 보탰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25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의료민영화 정책, 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통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협이 시범사업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오히려 정부가 원격의료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는 얘기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입법 의지를 밝힌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효과가 불분명하고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원격의료 시행은 안 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의협측에 “원격의료를 막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 의협 “원격의료 개정안 선 입법, 명확히 밝혀라” 복지부에 공문 보내 입장 확인 요청 … “위중한 상황 초래될 수도” (3. 25)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 의-정협의 시 원격의료는 ‘선 시범사업, 후 입법’으로 의견이 이뤄졌으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선 입법, 후 시범사업’으로 이에 정면 배치된다는 것.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원격의료 관련 부칙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 1년 동안 일정 범위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 같은 부칙의 내용은 지난 16일 공표된 의-정협의 내용과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의-정 협의문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입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에서 이날 배포한 자료에는 ‘법 공포 후 시범사업 실시’라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회원들은 복지부와 지난 2차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해 지난 24일부터 일주일간 예정됐던 투쟁계획을 유보했다”며 “그러나 이 보도 자료가 배포되자마자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원격의료 시범사업 앞두고 의-정 긴장 고조복지부 “입법 절차상 불가피” … 의협 “협약안 이행하지 않으면 투쟁 준비” (3. 26)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선 입법, 후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정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보건복지부가 “정부 입법절차상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해명하는 등 4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정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는 25일 저녁 의협이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배경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지난해 11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종료된 뒤 12월 의료계 우려를 반영해 ‘의료법 개정 후 시행 전에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칙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환기시켰다. 이후 내용의 변동 없이 정부 내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지난 6일 차관회의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정협의 내용(선 시범사업, 후 입법)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돼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될 경우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입법 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규정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의 방식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의-정협의 결과대로 의협과 함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의협과 협의한 대로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충실히 실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회와 공동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4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의협이 협의주체 선정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의-정협의 결과를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복지부가 입법절차가 복잡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일이라며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의 내부사정이야 어떻든 이로 인해 회원들의 염려와 혼란이 증폭됐다”며 “정부가 협의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새로운 투쟁을 준비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 지난 16일의 협의는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앞서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소식이 알려진 직후 복지부 앞으로 공문을 보내 “명확한 답변이 즉각 표명되지 않을 경우 위중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시민단체 “결핵 환자 개별 전수 조사는 인권침해” “범죄인처럼 다루는 접근” ... “사회적 편견 재생산” (3. 26)

결핵 환자들에 대한 정부방침인 ‘개별 전수 사례조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6일, 논평을 통해 “‘개별 전수 사례조사’는 ‘활동성 결핵환자’를 잠재적으로 결핵균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마치 범죄인처럼 다루는 접근”이라며 “일터, 학교 등의 주변 공동체에 무차별적으로 역학조사를 벌일 경우, 해당 환자에게 가해질 인권침해와 주변인으로부터의 시선과 죄책감으로 발생 가능한 심리적 외상에 대한 대책이 없어 결핵환자에 대한 낙인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광범위하게 재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7월부터 전염성이 강한 결핵 환자를 강제 입원시켜 격리 치료를 시키고 모든 결핵환자에 대해 ‘개별 전수 사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중·고등학생에 대해 비전염성 결핵 환자뿐만 아니라 결핵 접촉자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동안 정부가 결핵관리에 취해왔던 ‘강제입원’과 ‘격리치료’가 이미 질병을 스스로 치료할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인책이 되지 못했고 인권침해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입원 ‘명령의 기준’과 ‘해제의 기준’이 모호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다. 치료가 어려운 약제내성 환자의 경우 평생을 병원에서 입원명령 상태로 살아야 할 수도 있다”며 ‘결핵 발병이 곧 격리가 되는 환자의 인권을 구속하는 방식’인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 의협 “정부 약속 불이행” ... 총파업 재추진 점화 오는 30일 임총서 안건 논의키로 ... "의료혼란 책임, 정부에 있어" (3. 26)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의료법을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한 것에 대해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재추진을 논의키로 했다.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총파업의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의협의 결정은 정부가 ‘선 시범사업 후 입법’에 동의한 의정협의를 안을 깨고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을 명기한 원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한 의정 협의사항에 대해 말을 바꾸는 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의협은 “유보됐던 총파업의 재진행 안건을 오는 3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26일 개최한 제100차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혼란과 논란을 피하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투쟁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간협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불참 선언 의정 협의 부당성 이유 ... 대국민 홍보전 및 규탄집회 예정 (3. 26)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지난 18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협의결과에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이를 철회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와 의협이 협의한 결과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전을 전개하고 내달 의약단체와 연대 또는 간협 단독으로 규탄집회를 가진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협과 합의한 사항들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간협은 2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정부와 의협 협의 결과의 즉각적인 철회를 위해 정부와 의협의 합의 결과가 철회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국민 홍보전과 규탄집회를 갖기로 의결하고 PA(Physician Assistant) 업무 영역 합법화를 위한 대안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의협, 총파업 재개 전회원 찬반 투표 돌입 3일간 홈페이지서 실시 ... 노환규 회장, 청와대 향해 직격탄 (3. 28)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재개 찬반을 묻는 전회원 설문조사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는 노환규 의협회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도 포함됐다. 의협은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오늘(28일)부터 대의원회 임시총회가 열리는 30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총파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다. 이번 설문조사는 원격의료·건정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정부의 최근 행태가 의정협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의정협의 결과 수용에 따라 유보됐던 총과업 투쟁의 재개 필요성을 묻기 위한 것이다.

○ 의협 임총 순탄치 않을 듯 ... 목검, 피켓시위 등장 (3. 30)

○ 의사협회 대의원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거부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 저지 못해" ... 노환규 회장 신설 비대위에서 배제 (3. 30)

2차 의-정협의 결과물인 '원격의료 선시범사업 수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사실상 수용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차후 시범사업 철회에 대한 건은 새롭게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2차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과업투쟁을 유보키로 한 지난 전회원 투표 결과와도 반대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30일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상당수 대의원들은 의-정협의에서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협의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같은 대의원들의 질타에 노환규 회장은 "시범사업 추진은 오히려 원격진료 저지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 회장은 "지금까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근거를 가지고 반대해야 하는데 근거가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주장했고, 이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대해 투표에 부쳤고 재적 대의원 149명 중 찬성 133표, 반대 13표, 무효 3표로 의협 내 신설 비대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신설 비대위는 오는 4월 15일까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대의원회는 신설 비대위에 노환규 회장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85표, 반대 5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따라서 노회장은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에 참여할 수 없다.

○ 의협, 4월 중 사원총회 개최 ... 사실상 임총 결정 거부 "내부개혁 하겠다" ... "불발 시 자진사퇴할 것" (4. 1)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대의원회가 운영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거부하고 사원총회를 통해 내부개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노환규 회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회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한의사협회처럼 사원총회 구조를 만드려고 한다"며 "오는 27일 정기 대의원총회 이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대의원 직선제 등 정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원총회를 개최하려는 이유는 현재 의협의 권한이 대의원회와 16개 시도지사회장들에게 집중돼 회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노 회장은 "의협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시도지사회장 등을 회원이 직접 선출·해임함으로써 모든 의협의 권한이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관이 개정돼야 한다"며 "대의원회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정관을 위배한 것이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비대위 구성을 맡기기로 한 것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법상 사원총회는 전 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 즉, 약 5만명 이상(위임장을 포함)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이야말로 내부 제도개혁을 할 때"라며 "사원총회를 전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사원총회 개최가 불발될 경우에는 자진사퇴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 대전협 "전공의 수련환경 첫 법적 기제 환영" "전공의 특별법 노력은 계속될 것" (4. 1)

○ 의협, '사원총회' 개최 공식 결의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무효확인 소송도 (4. 2)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월 중 사원총회 개최'를 공식화했다. 또 '노환규 회장 제외 비상대책위원회 구

성 및 비대위 구성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이라는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의협은 2일 오전 제10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의협의 주요결정권을 회원에게 돌려주는 정관개정 추진과 의협 집행부를 비롯한 대의원회 의장 등 전체 대의원의 신임여부를 묻기 위해 4월 중 '사원총회'를 추진하고, 사원총회 시기와 방법은 노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임시 대의원총회가 집행부와 협의 없이 개최된 점을 지적하고,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회가 아니고 집행부가 해야 하는 일로,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정관을 위반했다는 것이 상임이사회의 판단이다. 즉 임총 결정은 의도적인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최재욱 상근부회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을 구성, 의-정 합의 결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 대전협, '전공의 근로환경' 설문조사 시작 최근 개정된 수련환경개선 8개 항목 추가돼 (4. 3)

○ 의협, 26일 사원총회 잠정 결정 ... 정기총회 전날 강행 (4. 3)

○ 의료기관 '중소기업' 범위 확대 지속 추진 중기청, 3년 평균매출 600억원 조정안 제시 (4. 4)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범위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중소기업 범위 확대를 통한 의료기관의 정부 지원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병원계의 건의를 수용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이 포함된 보건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를 현행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연간 매출액 300억 이하'에서 '직전 3년 평균 연간 매출액 6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올해 1월 입법예고 했다

○ "집단유진 참여한 회원 처분 시 할복하겠다" 노환규 의협회장, 복지부 행정처분 예고에 강경 대응 (4. 4)

○ 간협 "대전협 강경 대응 방침 유감" "PA 일부영역 합법화 요구,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실현 위한 것" (4. 4)

대한간호협회(간협)는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간호계의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 요구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전협은 최근 간협에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PA 합법화를 주장할 시에는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협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편법을 결코 묵인·방조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면서 "무엇보다 전공의협의회로부터 본회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 강경 대응 운운하는 공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PA 일부 영역 합법화는 전공의협의회가 주장하는 포괄적인 PA합법화가 아니다"며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부합하도록 의료관련 법을 개정해 간호사 업무를 재정립하고 이미 제도화돼 있는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확대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병원계, 임상시험 부가세 추징에 빨랐다 병협 "모든 임상시험 부가세 면제 필요" ... 국세청·기획재정부 등에 건의 (4. 7)

병원계가 모든 임상시험에 대해 현행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반발은 최근 국세청이 3개 학교법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면제돼온 임상시험 용역에 부가세를 추징한 것이 발단이 됐다. 대한병원협회(병협)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동법 기본통칙 12-35-4에 근거해 모든 임상시험에 부가가치세를 철회해줄 것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 그동안 병원계는 세법령 해석기준에 따라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부가세 면세 대상으

로 인식해왔다. 다만, 시판 후 임상시험 용역, 즉 4상 임상시험(PMS)에 대해서는 일부 과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2013년 하반기 일부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시 면세 대상인 줄 알았던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세를 추징, 병원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림대와 을지대, 가톨릭대 3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5년치(2008년~2012년) 부가세(약 130억원) 추징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병협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병협은 “그동안 국내·외 임상시험 용역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위탁 및 수탁)들은 면세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체결했으나, 국세청이 과세 추징함으로써 해당 수탁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고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이미 계약이 종료된 위탁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이에 따라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보라매병원, 임신 간호사 차별하다 해고” (4. 8)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이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를 차별하다가 해고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작년12월1일, 임신 14주 3일째인 임신부 비정규직 간호사가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보라매병원 수술실에서 해고돼 해당 간호사의 복직을 위해 5개월째 투쟁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노조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는 6개월마다 받는 평가를 3차례나 통과해 큰 문제가 없었다. 보라매병원은 처음에는 임신 사실조차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관리자가 임신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보라매병원장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노력하겠다’라고 답했지만, 2개월 동안 병원장의 병가 핑계만 대면서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대병원노조의 설명이다.

서울대병원노조 관계자는 “해고 전에도 해당 간호사가 차별받고 있었다”며 “이 간호사는 1년 9개월 동안 명절 및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단체협약에 보장된 임신검진휴가를 본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임신기간 동안 유급 검진휴가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고 간호사가 서울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자 병원은 서울시에도 거짓으로 보고했다. 무기계약전환시 요구하지도 않는 토익성적을 거론하면서 임신부 해고 간호사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3번이나 통과한 평가점수에 대해서도 ‘간신히 80점을 넘겼다’라고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수술실 간호사 일자리는 서울시가 인정한 상시업무다. 보라매병원은 상시업무 자리에 계약직 비정규직 간호사를 계속 사용하여 서울시의 고용방침을 어기고 있었던 것이다. 노조측은 “서울시가 보라매병원에 대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을 권고했지만, 병원 측은 당사자와 노동조합과는 대화와 교섭을 하지 않았다”며 해고 간호사의 복직과 정규직 발령을 요구했다.

○ 보건의료노조 “진흥원 연구결과는 짜맞추기” 반발 ‘강원도내 공공의료원 2개 매각·이전’ 연구결과에 반박 (4. 8)

강릉의료원은 민간매각하거나 요양병원으로 기능전환하고, 원주의료원은 경영성파가 없을 경우 철원·양구·인제·정선 등으로 이전·재배치해야 한다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자, 공공병원을 해체하고 매각하기 위한 ‘짜맞추기’ 연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강릉의료원 민간매각, 원주의료원 이전·재배치방안은 연구목적에도 맞지 않고, 지방의료원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며, 강원지역 도민의 요구와 강원지역 의료환경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엉터리 방안”이라고 연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 한의협, 한의사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논의 장 마련 9일 오후 2시 개최 ... 한의사 적정인력 수급방안 등 토론 (4. 8)

대한한 의사협회(한의협)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코리어나호텔에서 한의과대학의 교육 정상화 및 한의사의 적정인력 수급방안 해결책 마련을 위해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한의계 적정인력 수급방안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복지부와 한의과대학 및 국책 연구기

관에서 보건의료 인력 수급체계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의과대학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처방안과 우수한 한의인력의 육성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 전공의들, 정책토론회로 미래 논의 대전협, '젊은 의사, 의료 미래를 말하다' 토론회 개최 (4. 8)

○ 의협, 노환규 회장 탄핵 움직임 맞서 대의원 해산 추진9일 상임이사사회서 결정 ... 회비납부방법 개정 등 정관개정 추진 (4. 9)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역 의사회에서 임의로 결정해 선출하는 현재의 대의원을 해산하고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안을 오는 26일 열리는 사원총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노환규 회장에 대한 탄핵(불신임)을 주도하고 있는 대의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등 집행부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의장은 노 회장이 맡고 있다. 이날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사원총회 안건은 대의원 해산, 대의원 직선제 및 대의원 시도지사 임원 겸직 금지, 회비납부방법 개정 등을 포함한 정관개정이다. 추가변경 사항은 새로 구성되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노환규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대의원 선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사원총회 안건을 결정했다"며 "이는 의협의 가장 큰 권리를 회원에게 이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의원 해산은 의장을 포함한 대의원을 해산하고 새로 선출하자는 것"이라며 "회원총회 및 회원투표의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상시험 부가세 부과, 임상연구 여건 저해할 것"의 협, 한림·을지·가톨릭대 130억 부과 '철회' 촉구 (4. 10)

5. 질병/기타

○ 믿을 수 없는 일본 ... 이번엔 알츠하이머 논문 조작담당 연구자 논문 철회 의사 (3. 22)

○ "식품 중 벤젠, 위해우려 없는 수준" 국내 유통식품 중 벤젠 실태조사 결과 (3. 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 국민이 주로 소비하는 곡류, 서류, 채소류, 과일류, 육류, 어류 등 111개 품목(455건)에 대한 벤젠함량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97%(441건)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식품 섭취에 의한 벤젠의 인체 노출량을 고려한 위해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우려가 없는 수준이라고 24일 밝혔다.

○ 식약처, 유해시약 대체 시험법 마련 (3. 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시약을 사용하지 않고 순도, 정량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의약품 품질시험법 77개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 '2014 통계로 본 암 현황' 발간 (3. 25)

○ 음주 늘고 걷기 줄고 ... 건강행태 개선 절실 일본, 지역건강통계 발표 ... "만성질환자 위한 지역 보건의료 정책 강화" (4. 8)

보건당국이 실시한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음주율은 증가하고 걷기 등 신체활동 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8일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흡연·음주·운동·비만 등 핵심지표를 통해 나타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남자 현재흡연율은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큰 변화 없이 정체상태(2012년 46.4% → 2013년 45.8%)이고, 고위험음주율은 18.6%를 기록해 전년(16.1%) 대비 증가했다. 월간음주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걷기 실천율로 대표되는 신체활동 지수는 2008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2008년 50.6% → 2012년 40.8% → 2013년 38.2%)가 뚜렷했으며, 비만율(자기 기입)은 증가(2008년 21.6% → 2012년 24.1% → 2013년 24.5%)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체중조절 시도율은 2008년 38.9%에서 2013년 58.4%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질본은 체중 조절의 욕구는 높으나 성공률은 낮은 것으로 유추했다.

질본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각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건지표를 생산하도록 지역선택조사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지역보건지표은행 시스템을 통해 지역보건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보건지표은행 DB를 구축하고 지역선택조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예방센터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지역보건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조 파업…병원 비상체제 (3. 29)

충북 청주시의 노인전문병원 노조가 인력충원 없는 간병인 3교대 전환근무제 시행에 반대하며 2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병원 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 체제를 가동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분회 소속 노조원 90여 명은 이날 오전 청주시 흥덕구 노인전문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마지막 협상에서 병원 측이 3교대제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과 노조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청주시 흥덕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병원 노조는 인력충원 없는 3교대제 전환은 간병인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질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충분한 인력이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3교대제 실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파업에 따른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과 비노조원 등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병원 측은 "현재 환자 16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환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